

“남은 1년 국가 운명 좌우... 마지막까지 헌신”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위대한 국민과 당당하... 모든 평가는 국민·역사에 맡길 것
K-방역 세계 표준, 경제·문화·예술 등 소프트 파워 강국
올해 탄소중립 원년... 이달 말 P4G, 위상 높이는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남은 임기 1년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남은 임기 1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많은 위기 앞에서도 단결하며 전진했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며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헌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의

성일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G7에 연속으로 초청되는 나라가 될 만큼 국가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며 “K-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되었고, 세계는 우리 경제의 놀라운 회복력과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K-팝, K-뷰티, K-푸드, K-콘텐츠는 세계적 브랜드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문화에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다”며 “경제, 문화, 예술, 과학, 보건, 민주주의 등 우리가 가진 매력과 국제사회의 기여로 대한민국은 소프트 파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높아진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

을 강화하겠다”며 “코로나 이전까지 저는 모두 스물네 차례에 걸쳐 31개국을 방문했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48개

국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과 66회 전화 또는 화상 통화를 하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 앞으로도 인류 공통의 과제인 감염병과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탄소중립은 인류가 함께 나아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탄소중립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탄소 경제 전환은 단순한 친환경 정책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대상 범위 재검토해야”

민주 김윤덕 의원, 김부겸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시 갑)은 최근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권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전북의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대상 범위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총리 후보자에게 “전주시와 김 의원의 총리후보직에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며, 대도시권에 대한 획일적인 구분으로 전북도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이 외면돼서는 안된다”며 “광역교통 대상에 대한 의미 재정립을 통해 지금이라도 수도권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 권역별 메가 시티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부겸 후보자는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잘 챙겨나가겠다”고 답했다. 현행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여타제도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지난 1999년 처음 예타제도가 도입될 당시 국가예산은 84조원 수준이었다”며 “현재 558조 규모에 맞춰 예타제도를 전면 개선해 예비타당성 대상 기준을 5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해야 하고 이번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과 제4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부겸 후보자는 “현행 예타제도로만 따지면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유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유호상 기자



‘보도사진 속에 담긴 중국 빈곤 극복 과정’ 전복도가 ‘중국 빈곤 퇴치 성과 사진전’을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10일간 전북도에순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전북도와 중국 주광주 총영사관의 주최로 마련됐으며, 중국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8년 동안 중국의 빈곤상황을 극복하는 과정과 그 성과를 담은 중국 신화통신사 보도사진 63점이 전시된다. 10일 사진전 개막식에는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장정강 중국 주광주 총영사관 총영사, 최명규 전주시 부시장, 장태업 전북사진기자협회장, 이기전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박영수 원광대 총장, 남현우 수석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유호상 기자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민주 이낙연 전 대표,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심포지움서 제시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심포지움에서 차기 정부 비전으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심포지움 기조연설에서 “지금부터는 불안의 시대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린다”며 “8년 시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저의 대답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다. 국가가 개개인의 삶을 지켜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7 재보선 이후에 한 달 동안 전국을 돌며 많은 분을 봤다. 주로 청년들을 만났다. 청년들은 절망하고 있다”며 “청년뿐만이 아니다. 모든 연령층이 삶에 불안해한다. 중산층까지 내 삶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불안은 겪는다. 코로나 이후 소득 격차, 자산 격차, 교육 격차 등 더 심해지고 있다. 양극화는 공동체의 통합을 해친다”고 우려했다.

이 전 대표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켜주려면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 바로 포용적 책임정부와 혁신적 선도국가”라며, 먼저 ‘신복지’ 구상을 제안했다.

그는 “신복지 제도는 2015년 국제노동기구와 세계은행이 국제사회에 제안한 ‘보편적 사회보호’를 토대로

서 세계의 표준국가가 됐다. 가전제품, 반도체, 자동차, 조선, IT에서는 이미 세계 일류국가로 올라갔다. 그 뒤를 대중음악과 영화, 웹툰과 게임산업이 이어가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세계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영화 ‘기생충’은 할리우드를 놀라게 했다”며 “이제 한국은 추격자에서 추월자로 바뀌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진국에서 선도국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기본 체제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인제, 기술 제도 혁신을 주장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인제 혁신과 관련해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바꾸고, 디지털 첨단기술 역량을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조직과 국가운영 시스템도 혁신해야 한다”며 주택문제를 전담할 주택부와 에너지·기후변화 업무를 맡을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하는 지식재산처, 데이터 중요성 증대에 부응할 미래전략 데이터처 설치 등 정부조직 개편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연대와 공생은 경제, 사회, 외교, 안보, 통일 정치, 문화 등 분야별 국가 과제와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싱크탱크로 지난해 가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학자, 전문가, 전직 고위 공직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은열·신경민 전 의원이 실무를 맡고 있다. /뉴시스

연대와공생의 국정비전 제안

“전북 건의사업, 국가철도망 반영을”

도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국토부 2차관 만나 요구

전북도의회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 건의사업 반영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송지용 의장과 최영일·황영석 부의장, 이정민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은 10일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황성규 국토부 2차관(장관 대행)을 만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에서 건의한 사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서 동서 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동서축(전주~김천, 달빛내륙)의 국가계획 반영이 시급하다”면서 “특히 전북은 광역교통 기본계획 미포함 지역으로 대도시권 및 인접 시·군과 달리 기반 시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권은 독자노선이 전무한 상황으로,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가 검토 대상 사업에 반영된 전주~김천, 국가식품플러스타 산업선, 광주~대구, 새만금~목포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과 함께, 세종 국토부 청사 앞에서 진행된 성명서 발표에 동참했다. 이날 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4차 철



전북도의회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 건의사업 반영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전북도의회 제공)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추진위원 위촉

김희수·최영심 도의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의 김희수 의원과 최영심 의원이 전라북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추진위원회 제2기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김희수 의원과 최영심 의원이 참여한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추진위원회는 도교육청과 도청 그리고 활동가로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10일 열린 제2차 협의회에 참석한 김희수 의원은 “학부모가 아닌 사회에서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며 “조례를 발의했던 취지는 이런 경험을 많은 아이들에게 마을 내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2년 동안 위원으로 활동하며, 마을교육생태계가 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1기에 이어 2기 협의회 위원으로 임명된 최영심 의원은 “학교와 마을, 교사·지역주민, 교육청과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한다면 교육환경은 물론 지역 내실화까지 이뤄질 것”이라며 “위원으로서 마을공동체 형성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윤준병 의원, 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종료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은 지난 7일 대법원으로부터 검찰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는 선고를 받으면서 1년 여에 걸친 선거법 위반 재판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대법원은 교회 출입문 앞에서의 명함 배부행위에 관련된 항소심의 면소 판결에 대해 항소심의 판단이 타당하며,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를 한 검찰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의 대법원 판결은 지난 해 말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종교시설 안에서의 선거운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잘못됐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되었음을 인정할 것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사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들에 대해서 지침이 될 전망이다. 윤준병 의원은 “415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읍고창 주민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다”며 “주변의 많은 분들께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1년 여에 걸친 재판을 마무리한 윤준병 의원은 “이제 재판이 모두 끝났으므로 의원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히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